

이재명 “체포안 가결, 검찰 공작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

오늘 한덕수 총리 해임안 함께 표결 민주 친명계 중심 부결 분위기 확산 국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표결은 이날 오후 본회의서 한총리 해임안, 이재명 체포안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며 부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유력시되며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은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부속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재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재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다만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표결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95명 출석을 전제로 가결 정족수는 148 표가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관련 혐의는 전형적인 토착형 권력비리 혐의”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

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며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살집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청함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높아진데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가결 투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내부 이탈표는 5표 이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스스로 반복한데다 단식의 진정성도 일정 부분 훼손됐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 프레임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진다. 이 역시 재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보고됨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격양 “이 정권의 비인간적 무법천지 반드시 심판” 검찰 맹비난

검찰독재 저지 총력 투쟁대회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검찰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청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뭇 떨어지는 증거도 없이 증거 인멸도,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정치 제거의 공작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는 (민주당) 요구를 무시하고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사법을 빙자한 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국민은 정치 검찰에 늘어나

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의 비인간적 무법천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청구를 계기로 대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과 만나 “검찰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과 관련해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 독재 저지 총력 투쟁대회’를 열어 대어 투쟁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 신 후보자가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고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 후보자 지명을 힐난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아들의 김앤장 특혜 인턴 의혹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불가’ 의견이 나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런 후보자가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를 국민이 수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조오섭 “철도통합 무선망 국비 지원 광주 외면”

국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사업이 서울과 부산은 국비가 지원됐지만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20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4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비는 광주(130억원), 대구(484억원), 대전(260억원), 인천(380억원) 등 총1254억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도관련 시설은 오는 2028년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VHF) 사용이 종료되며 국가재난 안전통신망과 연계해야 하고 미구축시 철도안전법상 해당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철도도 철도공단이 맡아 2018~2027년까지 전액국비로 구축되고 있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4개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1~4호선은 30년 경과 노후시설 개량사업 예산을 활용해 총사업비 461억원 중 국비 138억원(30%)을 활용해 5년에 걸쳐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했다. 부산 1호선도 연장구간 건설 예산 총사업비 중 일부인 146억원을 투입해 1호선 전체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완료했다.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법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은 외면하고 30년 노후시설 교체, 연장구간 건설예산 등으로 우회지원한 것은 선택적 특혜라는 비판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상고 통해 무죄 입증하겠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포럼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반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꺾이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서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과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